

1994 - 2009 참여연대 15주년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시민 곁으로

이청화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는
물을 들고
목이 마른 시민 곁으로

동의보감 뒤져 처방한
해열제 첩약을 안고
머리 싸매고 앓는 시민 곁으로

오늘도 내일도
또 어느 폭풍 속에서도
오직 할 일은 이것이다

반짝이는 열쇠 짚랑거리며
잠긴 문 두드리는 시민 곁으로
참여연대는

차례

머릿말					
1부	15 키워드	역사	01	5475의 꿈	08
			02	5g의 무게	
			03	느티나무	
		분야	04	감시라는 햇살	20
			05	권리라는 열쇠	
			06	평화라는 공기	
		원칙	07	시민참여	32
			08	대안제시	
			09	투명재정	
		행동	10	발상의 전환	44
			11	1인시위	
			12	희망의 연대	
		사람	13	상근, 활동가	58
			14	자원, 활동가	
			15	거인의 어깨	
2부	창립선언문 연혁 조직 참여와 후원 도서목록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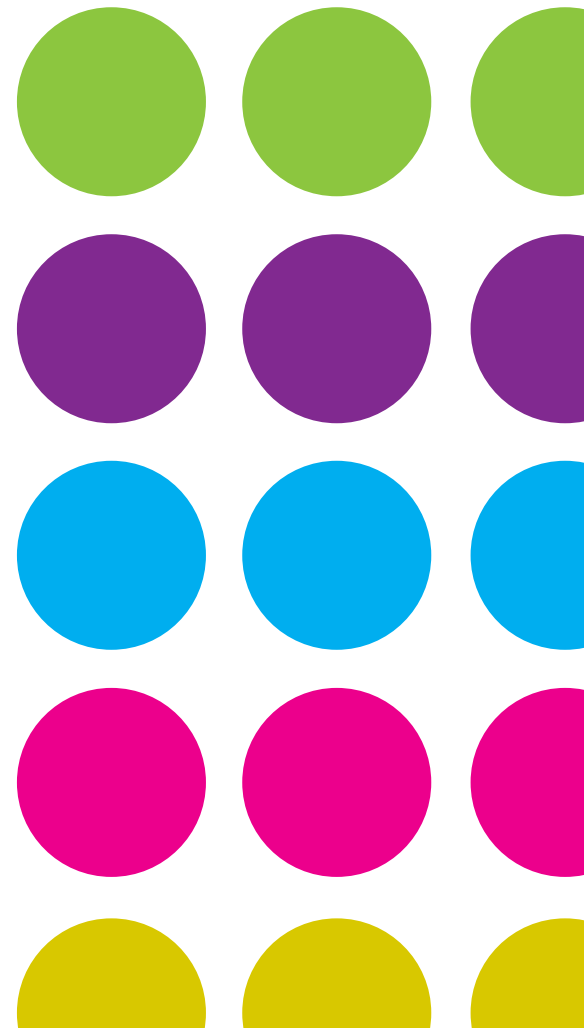
1

5

키

워

드





오천사백 칠십오일의 꿈

함께 꾸는 꿈, 현실이 되어 가다

"우리는 새롭게 태동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독선과 편견, 지배와 소외를 이기고 연대의 팔을
펼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의 연대의 광장을 넓혀
나갑시다."

1994년 9월 10일 서울시 서초구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오재식 공동대표의 창립대회사가
올려 퍼졌습니다.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흔들리지 않고 참여연대가 믿었던 것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When we dream alone, it is only a dream, but
when we dream together, it is a beginning of
a new reality."

독일의 한 시인에게서 얻은 이 귀중한 문구는
가진 것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포부를 가진 참여연대를 움직인 동력이었습니다.
그 동력으로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에 잊을 수
없는 명장면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참여연대가 꾸는 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연대 정관 제1장 제2조 목적

꿈이라고 칭할 만큼 원대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동력은
바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참여연대의
역할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세풍관련 정치인·언론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제수시켜야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발시 및 장소: 2002. 4. 14(월)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법원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 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손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② 이석희 씨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상당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지법에 고발하였다. 한편, ③ 대선자금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치인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역시 서울지방법원에 고발하였다.

2. 이석희 씨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2항) 부분에 대해서

지난 헌법 서울지법 특수1부(부장판사 서우정)는 4년여 동안의 비국도파정환에서 귀국한 이석희 전 차장에게 정치자금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다.

참여연대는 이후 의결이 이석희 전 차장이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을 일부 정명불양한 언론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배임수재(형법 제 357조)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

5g의 무게

세상을 바꾼 이 한 장의 문서

A4 한 장의 무게는 4.5g~5g. 참여연대에서 불과 5g 미만의 종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됩니다.

참여연대 3층 회의실 벽면에 있는 <세상을 바꾼 이 한 장의 문서>가 빛나는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문서는 기껏해야 종이 몇 장들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검찰, 재벌, 법원, 국회 등 권력이 전횡을 할 때마다, 언제든 달려가는 참여연대가 손에 쥔 것은 몇 장의 종이 뿐입니다.

정책에 대한 포괄적 제안은 이슈리포트나 정책제안서로, 사회현안에 대해 발언을 할 때는 논평과 성명서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열 때는 보도자료로, 그리고 직접 항의할 때는 공개질의서나 공문으로, 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입법청원서와 소장으로, 평온하기 그지없는 종이 몇 장이 참여연대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A4 한 장, 깃털보다 가벼운 이 재료로 참여연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모니터하고 견인해 왔습니다. 연금술사의 마법에 비견할만한 재주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얀 백지를 채워가는 과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권력감시'는 꼼꼼한 자료수집에서 출발합니다. 관보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 문서나 언론을 통해 일차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부족한 정보를 모읍니다. 빠짐없는 자료수집이 모니터링의 첫 걸음인데, 참여연대 사무실에 빼곡한 3공과일들이 그 작업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먼지 폴폴 나는 문서와 씨름하고, 깨알같은 숫자나 글자를 가용한 자료로 변환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묻혀있던 이슈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흡사 흙 속에 묻힌 문화재를 발굴해 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지독한 디테일, 참여연대의 스타일입니다.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 시민의 시각으로 본 상식의 잣대, 250여 임원의 전문성이 더해져, 비어있던 종이는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1997년 3월 7일 서울 종로2가에 있는 제일은행 본점에서 첫 발을 디딘 재벌개혁 소액주주운동, 1999년 8월 12일 법안이 통과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국 정치의 지축을 흔든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1999년 7월 23일 시작해 2005년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에서 1만 명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2006년 10월 11일 시작된 정책에 대한 관료의 책임을 묻는 관료 감시보고서 등, 지금도 쉽없이 이어지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모두 종이에 담겨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5g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



느티나무

그 나무가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지하 1층에는 <느티나무>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왼편은 콘크리트 벽으로 오른편은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네모난 방입니다. 비상구 알람 이외에는 한 줌의 초록색조차 갖지 못한 이 공간이 어찌다가 나무의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연원은 안국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국빌딩 신관 2층에 참여연대는 환경운동연합과 공동 출자해 철학마당 <느티나무>라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공론장이자 시민과 직접 만나기 위해 카페를 만든 것입니다. 시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 시민이 오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초기에는 '철학'이란 이름 때문에 사주나 점을 보러 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총선연대, 소액주주운동 등, 시민운동이 불꽃을 내뿜던 시기였습니다. 연일 느티나무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그 덕분에 시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전 국민에게 광고를 한 셈이었죠. 그렇게 <느티나무>라는 공간은 시민들 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2007년 8월, 참여연대가 종로구 통인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장 넓은 공간은 시민과 만나는 강당으로 정하고, 당연히 그 공간의 이름은 <느티나무>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교육기관의 이름도 <느티나무>로 붙였습니다. 느티나무홀엔 낮에는 기자회견과 토론회, 밤에는 시민강좌로 사람들이 연일 북적입니다.

이곳만 들여다보아도 한국사회의 흐름이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과 이야기가 머무는 곳, 통인동 <느티나무>는 어느덧 시민사회의 광장이 되었습니다. ●



감시라는 햇살

좋은 권력을 만들기 위한 만인의 지혜

"정부가 알아서 잘 할텐데 왜 나서서 사사건건 방해하느냐."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알아서 잘 할까요? 멀리 지난 일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권력형 부패와 전횡의 피해를 떠올린다면, 감시와 참견의 필요성은 분명하지요.

우리 집 공간이 음습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쥐나 벌레도 생긴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설상가상, 우리가 고용한 공간지기는 무능하고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야 할까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나서서 공간에 햇살을 비추고 공간지기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도록 지적하고 채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간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지해도 짜내야 합니다.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의 감시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감시는 햇살입니다. 햇살은 사후 치료제도 되지만, 사전 예방제의 기능도 합니다. 공간을 투명하게 하고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공간지기라도 긴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표방하는 권력감시의 본질은 '좋은 권력을 만들기 위한 만인의 지혜'입니다. 권력이 그 힘으로 나쁜 짓을 하거나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이 함께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국민도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권력감시입니다. 시민이 감시하는 곳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정부 정책은 훨씬 투명하고 합리적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과 기업의 횡포가 있을만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초창기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로 시작된 감시활동은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행정 전반으로까지 넓혀졌고,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제권력인 기업까지 감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003년 평화군축센터가 생기면서 국방정책으로까지 감시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이 한 줄의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1994년 참여연대가 창립선언문을 통해 선언한 이 한 줄의 약속 말입니다.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



권리라는 열쇠

품고 있던 상자를 열다

품고 있던 상자를 열자, 일상의 자잘한 사건들이 마구 튀어 나왔습니다.

굶직한 사회 현안에 밀려 늘 조연 취급을 받았지만,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럽던 것들이었죠. 충분한 이윤을 남기면서도 내리지 않는 휴대폰 요금, 지하철공사 측의 부주의로 몇 시간 동안 지하철에 갇힌 시민들, 거대한 빌딩이 막아버린 아파트의 일조권과 사생활의 비밀, 안전성 없는 식품문제 등 이 순간에도 동시다발로 벌어지는 일상 속 권리침해 사건들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바로 이들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작은권리찾기운동>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작은권리찾기는 생활 속에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는 시민의 권리를 시민들과 함께 되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시민들은 권리에 대하여, 특히 자유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될 때 비로소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취지문 1997.3.26.

일상적인 권리 침해 외에도,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이해하던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여 국민에 대한 의무임을 분명히 천명한 권리선언이었습니다. 복지는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리'라는 열쇠에 대해 시민 스스로 자각하자, 봉인되었던 상자들이 곳곳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상자들이 열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태어났다는 막중한 사실을 잊고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명한 국민이 권리의 열쇠에 대해 잘 정리된 헌법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



평화라는 공기

필수 불가결한, 거저 누릴 수 없는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립 9년차인 참여연대가 평화군축센터를 발족하자 사람들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던 단체가 왜 뜬금없이 평화운동을 하나고,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참여연대와 평화운동과의 조우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참여민주주의의 확장과 실현을 위해 활동하면서, 냉전 분단체제와 마주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우는 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부패'문제였습니다. 권력부패 분야를 담당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현 행정감시센터는 K-1 전차 부품 관련이나 FX 비리의혹 관련 등 국방비리 제보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은 분단체제와 마주섰습니다.

국방비리를 지적하고 국방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을 제기했던 활동과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통일분과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연구의 경험이 더해져, 참여연대는 2003년 5월 22일 평화군축센터를 발족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관련한 정책비판 및 대안제시, 국방감시 및 군개혁, 시민교육과 평화연대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화국가 만들기>의 공론화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운동은 결코 평화롭지 못합니다. 국방외교안보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은 매우 떨어져 있고, 시민의 상식과는 다른 논리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뒤로 미뤄두어도 괜찮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화라는 공기가 있어야 살아 숨 쉴 수 있지 않을까요? 공기라는 것이 그렇듯, 평화도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가치입니다. 동시에 거저 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평화라는 공기가 오염되거나 밀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 그것이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입니다. ●



시민참여

당신은 나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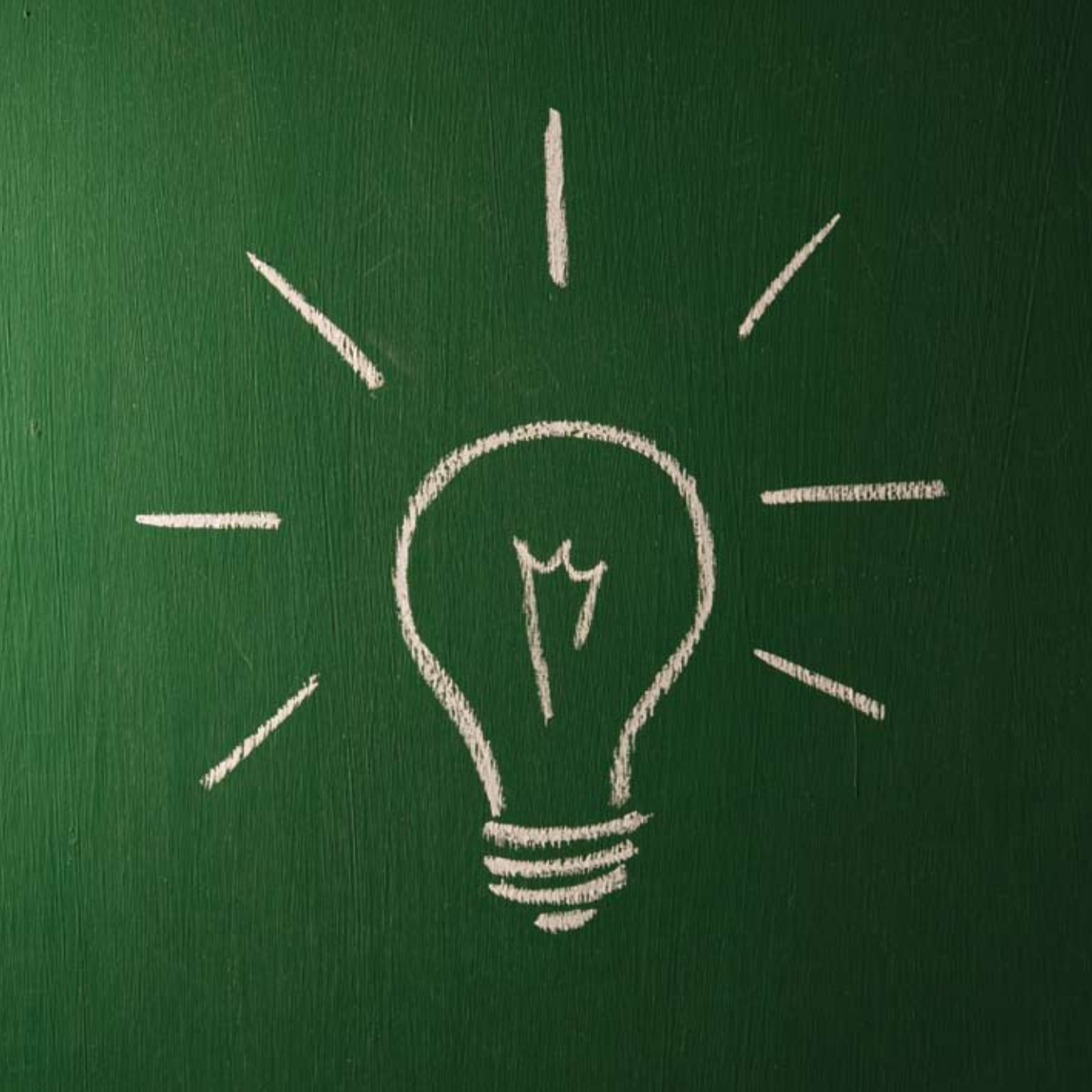
시시비비와 논쟁이 일상화된 참여연대 공간에서 절대 이견이 없는 단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가 그것입니다. 정관에 쓰인 대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므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쟁하는 참여연대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이 명제가 차지하는 위상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참여연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을 향해 있으며, 다루는 의제는 시민에게서 나옵니다. 활동의 성과도 고스란히 시민에게 되돌아 갑니다.

그뿐인가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 자체가 시민^{회원}의 참여^{후원}를 존재 기반으로 삼고 있으니, 참여연대에 있어 시민참여의 부정이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운명이라고 노래할 만 하지요.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사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감시자로서 참여할 때만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참여연대가 창립 당시에 처음 제기한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연대는 밖으로는 권력감시와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로서 맹렬한 활동을 펼쳐 나가며, 내적으로는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적 시민단체의 모범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직접 참여자인 회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해, 여러 측면에서 시민참여를 실현하며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시민운동을 해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수는 창립 당시에는 245명, 1997년에는 1500여 명, 1998년에는 3천 명을 넘어 2000년에 1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시민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캠페인과 교육, 행사로 연일 시민을 만나고 있어, 2008년 한 해에만 170여 회의 강좌와 행사로 1천6백 명의 시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인문-진보-행복을 나누는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를 열어, 더 많은 시민을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여전히 시민참여에 목마릅니다. 민주주의처럼 시민참여 역시 마침표가 아니라 늘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소될 수 없는 갈증을 위해, 오늘도 참여연대에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흐릅니다. ●



대안제시

시민의 마음을 담은 불빛

말로는 돌맹이 하나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의 첫 상근 사무처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강조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민운동이 실사구시實事求是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해야, 반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원순 변호사만의 주장은 아닙니다. 대안제시는 감시, 참여, 대안, 연대라는 참여연대 4대 방향 중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시민의 삶 가까이 필요한 각종 대안을 연구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이나 활동의 마지막을 주로 법률 입법청원으로 장식해 왔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6년부터 시작해 마침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까지 이룬 좋은 예입니다.

참여연대가 내놓는 대안은 구체적이고 정교합니다. 정책제안서나 입법청원안의 경우, 채택해서 현실 정치에 곧장 대입해도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얻은 행운이 아니라, 수많은 땀과 노고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참여연대 활동의 많은 부분은 감시와 대안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일이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풍부한 의제를 발굴하고 현실적인 분석과 대안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여기에 각 활동기구들에 소속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전문성과 상근자의 헌신, 그리고 시민들의 주장이 더해져, 비로소 현실에 바로 대입 가능한 대안이 만들어 집니다.

일상의 돌맹이를 옮기기 위해, 참여연대는 오늘도 쉽없이 사회를 모니터하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시민의 마음을 담은 대안의 전등에 불이 켜집니다. ●



투명재정

지구중력 보다 강력한 원칙

돈으로 시민운동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시민운동도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권력감시를 표방한 참여연대로서는 독립적인 재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까요? 참여연대 각종 회의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안건이 바로 '돈'입니다.

참여연대에서도 '돈'은 특별한 지위를 갖습니다. 동시에 지구중력보다 강력한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참여연대 재정원칙, 이른바 〈아름다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한다〉는 원칙입니다. 참여연대 운영 재원의 근간은 회원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열악하기만한 한국 시민사회 현실 속에서 100% 회비에 의한 운영은 신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오늘도 회비에 의한 100% 재정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아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비판과 감시에 집중하는 참여연대로서는 1998년,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원칙입니다. 참여연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매년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정기 후원행사를 엽니다.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며 적절한 수준의 후원금 상한제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계를 포함한 재정 전반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외부 회계사무소에게 위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감사를 두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매월 보고도 빠지지 않습니다. 월간지 〈참여자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도 〈아름다운 원칙〉의 연장선입니다.

참여연대에게 〈아름다운 원칙〉을 지켜내는 일상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정부 프로젝트 전혀 없이, 주겠다는 후원금도 '따지고 골라서' 받으면서, 주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살림살이의 궁핍함은 참여연대 생활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상근활동가의 낮은 급여와 복지는 참여연대의 오래된 내적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인 재정과 투명한 운영이 참여연대의 존재 기반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



발상 의 전환

입법청원과 공익소송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법이란 시민의 편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던가요? 종종 놀부 심보의 법들과 마주치기도 하지만, 이들도 중국에는 상식과 시민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없던 시절,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대에는 법이란 주로 억압의 도구였습니다. 시민운동이 그 칼날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으니, 법이란 칼자루를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을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법과 제도를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들어 내는 것은 참여연대만의 독보적인 개성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연일 입법청원을 하고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 정책실패한 관료, 일가의 이익에 집착해 회사와 사회에 손해를 끼친 경영인을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노령수당 소송, 비닐하우스 주소찾기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총 216건의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제개혁분야의 주주대표소송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재벌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새로운 운동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발명했다기보다는 발견한 것입니다. 헌법을 포함한 법 체계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라는 구체적인 토대를 활용해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시민은 공감하고 크게 지지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참여연대는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렇게 법과 제도는 참여연대와 뗄 수 없는 전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

주요 입법청원

1994	내부고발자보호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1995	5.18및5공비리수사특별검사제도입에관한법을 제정 청원	반부패 5대 개혁과제 의견 청원(검찰개혁, 돈세탁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1996	상속세법 개정 청원 (변칙상속·증여에 관한 과세 강화)	200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부패방지법 제정 청원		개인회생법 제정 청원
	경찰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개정청원(검찰개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1997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등 개정청원(국회개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청원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청원(정치개혁)		임대주택법 개정 청원
1998	상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 청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2004	집단소송법 입법청원
	고위공직자인사위원회법 제정 청원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에 관한 의견 청원
	대통령기록보존법 제정 청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국민연금법 개정 청원 (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청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법 제정 청원
1999	전파법 개정 청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
	조세형평실현과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의견 청원		국회법 개정 청원
200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2005	임대주택법개정안 입법청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청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입법청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청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입법청원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청원	2006	아파트 고분양가 규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
	생명과학인권윤리법 제정 청원		고금리 규제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 입법청원
	납세자소송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국회법 개정 청원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200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청원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제정 청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청원		공직자의 스톱웍선보유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국회법 개정 청원
	정당법 개정 청원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
2002	폭리제한법 제정 청원	2007	퇴직관료의 청탁행위 금지 입법청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학원법 입법청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별법 제정 청원	2008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촉구 의견청원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

법을 활용한 주요 감시활동

1994	국민연금 관리부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소송
1995	국민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심판제청청구
1996	선거연령 만 20세 위헌 헌법소원
1998	국회의원 이권관련 상임위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1999	생활보호법 제5조2항위반 복지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2000	건강보험료 수가인상 위헌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찾기운동'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취소청구소송
2002	가구유형(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생계비 결정고시처분위헌확인소송
2003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안산시장 상대 보복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2004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5	감기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비공개처분관련 정보공개 소송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농림부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
	KMH(한국형헬기사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 관련 정보공개 소송
2006	평택미군기지이전협상에 대한 정부의 졸속협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2007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예방)감독 적절성에 대한 감사 청구
	공직선거법 93조 위헌 헌법소원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이라크 파병정책 정보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처분 관련 행정소송 청구
2008	공정택 뇌물 혐의 수사촉구서 검찰에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감사청구(교육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가전 비용 전용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사법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집시법상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요구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7 헌법소원
2009	한상률 전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의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1 인 시 위



시민운동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집회나 시위입니다. 몇 명이나 모여야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미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의 바다를 경험했으니, 머리에 떠오르는 숫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수백 수천의 숫자 앞에, 참여연대는 1을 내놓았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2000년 겨울에 입증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1인 시위가 세상에 첫 선을 보였던 그날은 2000년 12월 4일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가로막는 집시법의 한 조항에 있었습니다. 2003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외국대사관 주변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로 인해, 참여연대는 이미 탈세를 제보한 삼성3세 이재용 씨에 대한 과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국세청 건물 앞에서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있던 종로타워 건물에는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집시법 2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를 규정하는 것이 다수인이라면, 한 사람은 어떻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첫 1인 시위는 서울 종각역 국세청이 있던 종로타워 앞, 출근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 종이를 덧댄 피켓에는 '국세청은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라는 검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 들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받침대도 만들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혼자서 시위를 하겠다고 이미 밝혀 둔 상태라 국세청 공무원들, 종로경찰서 정보과 형사들, 기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이런 시위는 불법이다"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참여연대는 "불법이 아니다. 법률 검토를 다 끝낸 것이니 고발하려면 해라"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종로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들이 해석을 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시위형태에 곤혹스러워 하면서 "불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견해를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이렇게 1인 시위가 탄생했습니다. 이 시위방식이 이후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1인 시위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당시 1인 시위는 릴레이로 이어졌는데, 총 인원 10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9일째 시위날, 참여연대는 국세청으로부터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난 주에 (이재용 씨 등에게) 과세통지를 했습니다." ●



희망의 연대

함께 비를 맞는 사람들

이름에서부터 표방했듯 연대는 참여연대의 반쪽입니다. 조직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편견과 이기심을 넘어 큰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것. 동시에 한쪽이 흡수하거나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연대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게 연대란 함께 비를 맞는 사이라고나 할까요. 지난 15년 동안 참여연대는 기꺼이 함께 비를 맞는 역할을 자처하며, 시민사회운동 속에서 하나의 밑알이 되어 왔습니다. 2000 총선시민연대 등 한국사회 대표적인 연대운동에는 충실한 매개체 역할을 한 참여연대가 있었습니다.

연대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감대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공감대의 가장 중요한 축은 상식입니다. 연대란 이익과 편견에 갇히지 않고 상식의 잣대로 세상을 재보고 변화시키려는 이들의 어깨동무입니다.

참여연대의 연대는 국경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시민참여 역시 빠른 속도로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에 발맞추어 노동, 환경(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평화 등 각 분야별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태국에 사무국이 있는 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에 2000년 낙선운동 이후 가입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의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FORUM-ASIA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나 APA Asian Peace Alliance 도 참여연대의 주요한 파트너입니다.

2004년 참여연대는 UN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를 취득해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2005년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해 북한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8년에는 어느 해보다도 UN Advocacy 활동이 활발해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심의와 9차 유엔이사회에 참여해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두발언과 로비활동을 벌이기도 하고, 11월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사전심의 pre-sessional working group 에 참여했습니다. ●



상근, 활동가

1인분의 일

"1인분 주세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이렇게 외쳤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푸짐한 양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음식이 아닌 일이라면, 당혹감은 배가 되겠지요.

참여연대를 구성하는 인적 구조 가운데에는 45명 내외의 상근활동가가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로 구성된 상근자들은 1만 회원과 250여 명의 임원, 20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 탄 참여연대 호號의 승무원입니다.

참여연대라는 배가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라는 목적지를 향해 적절한 속도와 안정성을 유지하며, 최적의 항로를 향해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살피는 일이 승무자의 몫입니다. 시민의 바다를 향해하는 일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바다의 움직임을 살피야 하고, 갑작스러운 태풍과 폭우처럼 긴급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1인분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양보다는 종류가 다채롭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활동가 개개인은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는 현장성,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대중성,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전문성, 조직을 운영하고 통합하는 조직력을 갖출 것을 요구 받습니다. 아침에는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쓰고, 낮에는 캠페인 기획자가 되고 저녁에는 대중행사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지요.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오늘도 상근 활동가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자들의 능력은 늘 부족하지만 임원과 자원활동가와 함께 오늘도 참여연대 뚝의 과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



자원, 활동가

밤마다 그들은 김밥을 먹는다

때때로 참여연대의 밤은 낮보다 빛납니다.
비상근 활동가들이 속속 모여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생업에 열중하고 저녁에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자원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참여연대의 사업 전
분야에 걸쳐,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며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뿔어내는 에너지
덕분에 참여연대는 밤이 사라진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낮에는 더 많은 자원활동가가
활동합니다.

상근활동가의 활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빙산에서 물 위로 보이는 부피는 전체
얼음의 10분의 1 뿐이라고 합니다. 참여연대도
그렇습니다. 상근활동가의 10배에 달하는
자원활동가가 참여연대 사업의 각 분야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업인 등 250여 명의
전문가가 각 센터의 실행위원 등으로 참여연대의
전문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시민과
회원들께서 안내데스크, 우편발송과 전화작업을
비롯해, 자료의 취합과 분석, 번역과 사진촬영,
영상편집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활동가이자,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자원활동가가 없이는 하루도 운영될 수 없는
참여연대입니다. 변하기 어려운 것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일상을 쫓개고 매주
스스로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참여연대의
한 축을 짊어지고 함께 묵묵히 걸어주신
자원활동가들이 없었다면 참여연대는 이미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이 분들에게, 참여연대는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을까요? 주로 김밥을
나눴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도 쑥스러워서,
밤마다 있던 회의나 행사에서 그냥 김밥 한 줄씩
함께 먹었습니다. 그 김밥 한 줄의 힘으로 함께
참여연대를 밝혔습니다. ●



거인의 어깨

1만 거인의 어깨를 딛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다

참여연대 존재의 기반은 1만 회원입니다.
 참여연대에 회원이 없다면, 참여연대는 그 어떤
 권력과도 맞설 수 없었을 것이며, 어떤 권리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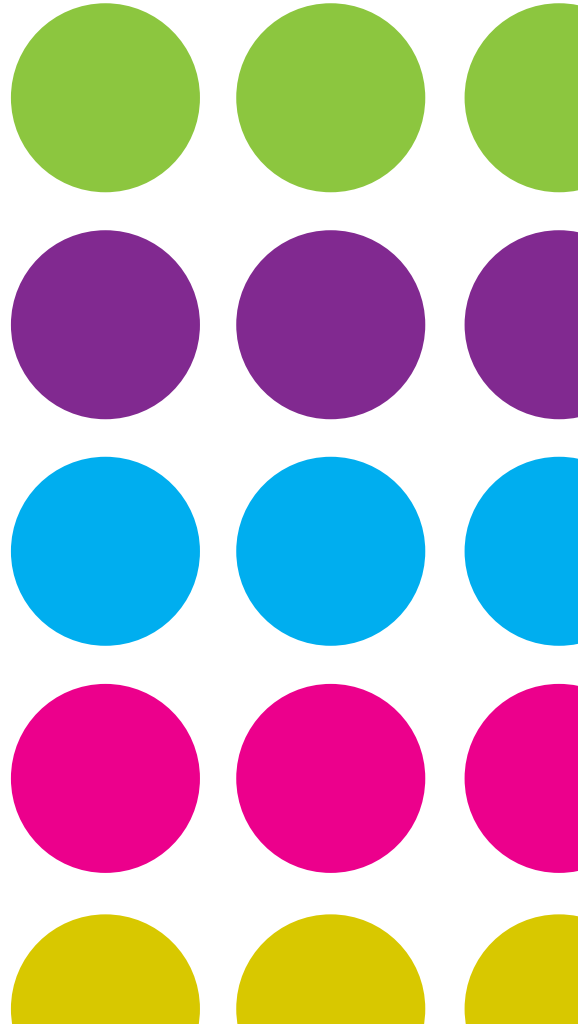
1만 명의 회원이 계시지 않았다면, 참여연대가
 지난 15년 동안 감히 청와대, 검찰과 법원, 재벌
 등과 어떻게 맞서서 싸우며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내서 제도까지
 바꿔내는 대안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또 어떻게
 분단의 상흔이 치유되지 않은 채 갈등과 대결의
 불씨가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군축을 논하고
 평화국가를 만들자고 이야기 할 수 있었겠습니까.

1만 회원은 참여연대에게 그저 자애롭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낌없는 박수와 후원만큼,
 참여연대가 방향을 잃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누구보다도 먼저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그랬기에
 참여연대가 한결같이 15년을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참여연대 회원'이라는 거인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햇살이 좋은 날에도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함께 비를 맞고 햇살을 누린 회원들이말로,
 참여연대의 본령입니다. 1만 거인의 어깨를
 딛고, 더 큰 세상을 바라 보겠습니다. ●

창립선언문
연혁
조직
참여와 후원
도서목록



창립선언문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구실을 내걸며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군부정권은 마침내 국민의 결집된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 의 붕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되면서 세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피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개혁의 과제를 표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후에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경색된

공안정국의 분위기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 선 우리는 민주주의의 알맹이를 채우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가야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80년대까지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길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란 문자 그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인이 머슴처럼 취급받고 국민의 공복에 불과한 사람들이 주인 위에 군림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만연해 왔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이러한 본말전도적 현상을 스스로 개선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함으로써 나라의 주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15년 전, 참여연대가 염원했던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는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5년 전, 참여연대가 극복하려 했던 그 시대가 다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도달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과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994년의 창립선언문은 2009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참여연대의 나침반입니다.

1994. 9. 10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성의 존엄이 실현되고 인권보장을 으뜸의 가치로 삼는 정치이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자유롭게 말하고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사회문제, 인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무관심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신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하겠습니다. 지난 몇 달에 걸쳐 우리는 지방자치와 남북통일, 복지사회의 미래상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가슴을 열고 논의를 펼쳐 왔습니다.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토론의 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뜨거운 정열이 넘쳐흐르는 청년학도들, 권력에 의해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면서도 병어리 맹가슴 앓듯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던 시민 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랜 산고 끝에 우리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을 참여와 인권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희망의 공동체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가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다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의 조그만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 참여와 인권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

참여연대 15년

1994 - 2009

1994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명칭으로 창립 총회 개최
200여 명의 회원과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공익소송센터, 내부고발자지원
센터, 인권센터, 사회복지특별위원회로 활동 시작

국민생활최저선운동 창립 직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생
활최저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국가가 베푸는 시혜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여 국민에 대



한 의무임을 분명히 천명한 권리선언이었습니다. 복지는 부자나라에서나 가능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가 발표한 국민생활최저선은 국민연금 가입자권한 확대, 최저생계보장,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장애인 수당 현실화 등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복지의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과 각종 사회보험 개혁운동으로 이어져 1999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복지가 국가가 주는 시혜가 아닌 의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공익소송이라는 방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령수당의 경우입니다. 구청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령수당 지급 연령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한 노인과 함께 노령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전개하여 마침내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령수당의 지급을 예산상의 이유로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방기임을 입증해 낸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공익소송 운동은 그 후 공익법센터 설립 등으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1995 3월 23일 제1차 정기총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로 명칭 변경
사법개혁운동 근대 사법100주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합니
다. 국민에게 법은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성역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이 더 이상 국민에게 군
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사
법감시센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대 과제>를 선포하고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
다. 참여연대는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왜 법조



인 수는 왜 이렇게 적고 그 비용은 이토록 비싼가? 법조인 수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독점행위 아닌가? 전관예우 등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이토
록 많은데 법조비리를 근절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인과 권력층, 기업인들에게는 번번이 봐주기식 축소수사를 일삼으면서 힘없는 시민들에게는 비인간적
철야수사와 구속 등 반인권적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는 언론사와의 기획기사 연재를 통해 문제를 낱알이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법개혁을 여론화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당 법조인 수를 각 나라별로 비교하여 법조인 필요인력을 제시하
는 한편,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등 법조비리를 엄단할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선변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법률구제 대책을 제시했으
며, 특별검사제, 재정신청제, 불구속 수사 확대 등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 견제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이러한 활동은 김영삼 정부 차원에서
사법개혁을 본격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김대중 정부에도 이어져 199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1996 5월 10일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창립 | 6월 4일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인 가두 서명 시작 | 9월 10일 시민교육기관 참여사회아카데미 신설 | 10월 23일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승소 | 11월 7일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2001년 7월 16일 국회 통과)

맑은사회만들기운동 1995년은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터진 해였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계속되는 한 경제성장의 신화도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져 내릴 것을 경고하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맑은사회 만들기 운동에 착수했습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이 너무 커서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1996년 1월 부패방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참여연대 부패방지법안을 발표합니다. 같은 해 4월 15대 총선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 같은 해 11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이를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그 후 대선을 통해 각 당 대선 후보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요 공약화 시킨 후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 서명압력을 계속하여 15대 국회의원 253명(299명 중), 16대 국회의원 203명(273명 중)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침내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997 3월 7일 제일은행 주주총회 참가로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시작 | 3월 26일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6월 3일 제일은행 대상 주주대표소송 제기, 대한민국 최초 주주대표소송 | 9월 27일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설립 | 11월 22일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시민과학센터) 설립

작은권리찾기운동 시민 일상생활에서의 권리찾기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작은권리찾기본부를 발족하여 생활 속 권리침해를 따지기 시작했죠. 누구나 겪었을 관공서의 일선 행정이나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피해사례부터 모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민압력을 행사하며 나아가 법률적 대응까지. 이렇게 시민고발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방세나 과태료 등의 부당 징수,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개선, 임대주택 부실관리 실태 개선 등 일상 속 우리 모두가 겪는 크고 작은 권리를 찾아나갔습니다. 이렇게 시민권리운동의 전형이 만들어졌지요.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자제한법, 파산법 등 민생과 관련된 제도개혁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부당한 전화설비비 반환, 무선전화 전파사용료 폐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998 3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 주총 최장시간 13시간 30분 진행 | 7월 23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 청원 (1999년 8월 12일 국회 통과) | 7월 24일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 8월 19일 한국논단 대상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10월 1일 <복지동향>창간

소액주주운동 IMF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부패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7년부터 전개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은 IMF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그 실천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한보부도사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

실기업인 한보에 불법으로 무제한적인 대출과 보증을 해줌으로써 자신은 물론 나라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제일은행의 경연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기업의 주인이지만 이제까지 기업경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기업경영에 대해 발언하고 나아가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함으로써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물론, 기업 전체를 깨끗하고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문제의식에 의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부실경영인들에게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여 1998년 7월 400억 반환 판결(1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소액주주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IMF전후 5대 재벌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으로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인 재벌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과 내부거래를 질타하는가 하면 장부열람권을 행사하고, 주주대표소송을 전개하는 등 법에 보장된 소액주주권을 이용한 기업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삼성일가의 변칙증여,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바이코리아 불법운용 등을 지적해낸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재벌개혁운동의 주된 성과입니다.



1999 2월 6일 제5차 정기총회 <참여연대>로 명칭 변경, 조세개혁센터 출범 | 5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

예산감시 정보공개운동 1998년 정보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이나 예산운용에 대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시민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5월 정보공개사업단을 발족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IMF 직후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정부는 긴축재정을 외치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고속전철비리 등 각종 예산낭비 사례도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획정보공개청구운동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판공비 공개운동입니다. 판공비의 예산서상 명대비로 지출되고 그 증빙도 제대로 남지 않는 대을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청구를 시작으로 1999년 치부 등 예산관련 부처장의 판공비 등 각급 기관니다. 또한 '나라곳간을지키는사람들' 이란 예산라잡이와 같은 시민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정보공



청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아무런 계획서 없이 점표적인 낭비성 예산입니다. 참여연대는 1998년 각각 구청 판공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의 판공비 규모와 사용내역을 일제히 청구하였습낭비감시 시민모임을 구성하고, 정보공개청구길개운동 대중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00 12월 12일 <2000 총선시민연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412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1월 24일 낙천명단 발표 | 4월 3일 낙선명단 발표 | 10월 1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 입법청원 (2001 12 07 국회 통과) | 16일 16일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청원 (2003 12 17 국회 통과) | 7월 7일 공익법센터 출범 | 11월 21일 국제청 앞에서 최초의 1인 시위로 재벌 변칙세습 증여추구 낙천낙선운동 새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 정치는 아직 낡은 시대의 구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감정과 봉건제 보스체제를 축으로 하는 낡은 정치의 문제점은 특히 IMF시대에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000년 1월 12일 412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하여 역사적인 낙선운동을 시작합니다. 1월 24일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선거법은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불법화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선거법 87조는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개정하지 않아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위헌적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낙선운동을 강행하였고 총선연대의 이 같은 방침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낙선운동은 총 대상 86명 중 59명을 낙선시키는 대성공을 거두어 유권자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내외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한국의 낙선운동을 모델로 하는 일본판 낙선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낙선운동은 성공하였지만 낙선운동의 지도부는 그 후 선거법 위반으로 32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울산과 광주 등 일부 부지역의 대표자들은 이미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의 선거법은 낙선운동과정에서 일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지닌 채 국민의 참정권을 옥죄고 있습니다.



2001 3월 14일 이동전화 요금인하 시민행동 캠페인 시작, 100만 명 참여 | 3월 21일 장 애인 선거관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7월 25일 서울시 24개 구청 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이동통신요금 인하운동 세계 최대의 통신 대국,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넘어섰는데도 이동전화요금은 가입자 700만 수준이던 지난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가입자 확대,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폐지, 마케팅비용 축소 등의 달라진 조건을 배경으로 사업자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자들은 여전히 적자운영과 신규투자 부담으로 여력이 없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한 채 요금인하를 외면해 왔습니다. 정보통신부 또한 현재의 요금 수준이 적정하다며, 사업자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는 전 인구의 60%를 가입자로 확보하고서도 여전히 시장의 확장에만 몰두할 뿐 소비자의 권익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저한 공급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기본무료통화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높은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기본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인하기 위한 이동통신소비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월 14일 시작된 <이동통신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에 지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무려 80만 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애초부터 요금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이동전화 사업자와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표준요금을 8.3% 인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폭주하는 서명을 감당하지 못해 캠페인 사이트가 여러 차례 다운될 정도로 열광적인 성원을 받으면서 진행된 ‘100만인 물결운동’은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하였습니다.



2002 9월 24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대선 정치자금 감시운동 2002년은 선거의 해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당내 경선 때부터 돈선거 추방과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시민 감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국민경선 정치자금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경선이 치러지는 전국을 돌며 회계장부 공개 및 불법선거운동 모니터 운동을 벌였습니다. 비록 모든 후보들이 회계장부 공개에 응하지 않아, 일부 후보들의 회계 장부만을 열람할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운동자금 운용 내역을 실사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성을 평가함으로써, 최초로 정치자금 공개 사례를 만들어내고 깨끗한 선거에 한 걸음 다가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연말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후보들의 정책 정보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후보들



의 공약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정책 검증 활동을 벌였으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선유권자연대를 조직하여 새 대통령이 실천해야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돈선거 추방과 정책을 통한 후보 평가를 실천하는 유권자약속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3 3월 15일 <정전 50주년,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캠페인 시작 SBS공동진행 | 3월 25일 참여연대 <김대중정부 5년 검찰백서>발간 | 5월 22일 평화군축센터 출범 | 6월 18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운동> 시작 (2004년 첫 여성 대법관 임명, 2005년 연공서열제를 탈피한 대법관 임명) | 9월 23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발족, 전국 35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평화캠페인 2002년에 조주형 대령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F-15K 구입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비록 F-15K 도입을 좌절시키지는 못했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국책사업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여중생 살인 진상규명 및 소파개정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평화군축센터가 출범합니다. 평화군축센터는 2003년 3월 발발한 미-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이라크 파병반대 연속공개서한을 발송하는가 하면, 국회를 대상으로 파병반대 의원서명을 시도하여 68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평화군축센터는 2002년 10월부터 본격화된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여야 40명의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0여명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국민협의회를 2003년 5월 발족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의회-시민사회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고, 2003년 6월 여야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방미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의회와 정치지도자, 시민운동지도자들을 면담, 한국민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연간캠페인으로 SBS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반전평화의 이념을 전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 뿐 아니라,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세계 난민들과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희망의 손> 모금운동을 벌여 많은 네티즌과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04 2월 3일 <2004 총선시민연대> 발족, 전국 28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2월 5일 낙천명단 발표 | 2월 12일 낙선명단 발표 | 3월 13일 탄핵무효·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결성, 전국 5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가 | 7월 1일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 | 7월 23일 참여연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 취득 | 10월 4일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DB와 국회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개설 | 10월 16일 참여연대 창립 10주년기념 시민한마당 <참여로 좋은 세상만들기>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희망UP캠페인 최저생계비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급여기준이며, 경로연금과 장애수당 등 정부의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우리사회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너무 낮은데다가, 지난 5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는 생활의 수준이 더욱 저열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2004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5년만에 처음으로 최저생계비의 실제계측이 이뤄지는 해였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5년간 크게 벌어진 최저생계비 상승률과 일반가구의 생계비 상승률의 격차를 줄이고, 최저생계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캠페인은 7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직접 살아보는 하월곡동 한달나기를 비롯해 '일일 릴레이체험', '내집에서 한달나기' 등의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에 큰 공감을 하셨습니다. 각 당 보건의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 등 정책결정자들이 릴레이 참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달 체험 후 참여연대는 체험결과를 분석하고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체험이 실증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고 입법로비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최저생계비 개선과 빈곤대책 보완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것은 물론 1999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최저생계비 실제계측에도 캠페인으로 나온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통해 주로 물가인상을 수준의 인상만 이뤄졌던 최저생계비가 8.9%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5 1월 28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2000 01 31 소송 제기), 1만명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 | 7월 18일 부설기관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의 재벌> 1-5권 발간 |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참가 | 9월 29일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로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2004 04 30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상대 소송 제기) | 10월 28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일부 승소 (1998 10 22 소액주주 22명 삼성전자 이사진 상대로 소송 제기, 이진희 등 이사진, 회사에 190억원 손해배상 판결 | 5월 공직자 주식보유 규제하는 백지신탁제도 도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운동 2005년 우리 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10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수준에 있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소득격차는 18배가 넘었습니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과 극단적인 차별 문제는 아무런 현실적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절대적 수준에서나 상대적 수준에서나 위험수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부 경제지표의 외형적 성장세를 근거로 더 이상의 위기는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을 펴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구조개혁, 기업 규제완화, 무분별한 개발 추진 등 과거 성장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경제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사회발전의 잠재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사회로 후퇴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국 133개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9월 22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출범했습니다. 우선 요구되는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7대 분야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 하나라도 제외할 수 없는 주요 과제들입니다. 의제발표만이 아니라, 공동 입법청원, 범국민 토론회, 양극화해소 촉구 개혁통신 발행, 비정규권리 보장 입법촉구 행동주간 지정, 양극화해소와 경제사회개혁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국민행동을 펼쳤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입법 및 예산확보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2006 1월 5일 보건복지부의 항생제 투여 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참여연대 등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 8월 17일 LG 주주대표소송 승소 | 8월 24일 경제개혁센터, 경제개혁연대로 분화 독립 | 9월 1일 대상 주주대표소송 일부 승소 | 10월 11일 관료감시운동 시작, 1차 보고서 <도박게임 사태 책임규명 보고서> 발간

관경유착(官經癒着)을 막기 위한 관료감시운동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IMF와 카드대란 등, 국가를 뒤흔들었던 몸살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대다수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관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누구인지도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참여연대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감시와 모니터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료의 책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2006년 10월, <관료감시보고서 1호: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책임 보고서를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위한 관료감시운동' 이 본격화 됩니다. 이어 <경제관료 및 건설관료의 퇴직 후 재취업 관료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가 퇴직 직후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이 참여연대의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록 경제건설관료와 기업의 유착은 끊어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관경유착의 고질적 폐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관료감시운동은 이후 <관료감시보고서2: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관료감시보고서6: 한미 쇠고기 협상, 어느 관료가 주도했나>, <관료감시보고서10: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와 대안제시를 담은 관료보고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 3월 3일 참여연대 제13차 정기총회, 노동사회위원회 출범 | 8월 10일 참여연대 중로구 통인동 사옥 건립, 이사 | 9월 27일 <변호사 징계정보찾기- 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사이트 개설, 최초 변호사징계정보DB 사이트 | 11월 15일 삼성 이견희 불법규명 국민행동 출범, 전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불량변호사 아웃! 변호사 징계정보 제공 서비스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 찾기 참 어렵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수임료 때먹고, 소송서류 제 때에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은 변호사 같지 않은 불량 변호사 만날까 두렵습니다. "징계받은 변호사부터 구분해 보자!" 참여연대는 징계받은 변호사가 누구인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들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징계정보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회보를 뒤지고 사이트를 뒤져가며 1933년부터의 징계정보를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과정은 힘들었으나, 이제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면, 그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협 등의 변호사 단체들이 진작 자발적으로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1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은 참여연대가 창립할 때부터 집중한 주요 활동 영역입니다. 2007년에는 변호사 징계정보 서비스 외에도,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안 주민의 검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주축이 되어 법률가로 구성된 공익소송대리인단을 꾸려, 1년 아니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법적 공방에 대비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8 3월 15일 이견희 일가 불법규명과 기름유출사고 완전해결을 위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마당 개최 | 3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37개 단체와 함께 <NGO 보고서> 발송 | 5월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와 이후 활동 | 9월 9일 - 10월 15일 <우리사회 노동히어로가 말한다> 시리즈 진행 | 10월 8일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 발간 | 10월 포탈사이트와 함께 <국정감사, 저도 질문있습니다> 캠페인 진행 | 10월 검찰60주년을 맞아 <검찰-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진행 | 11월 4일 <관료감시보고서-10 : 2008년 공공기관장 교체분석 보고서> 발간 | 12월 단행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발간 | 희망복지학교, 평화학교, 인턴 프로그램을 포함, 170회 강좌와 행사 개최



민생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선 지키기에 집중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고 안정되어 가던 민주주의도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대결과 긴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민생,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등은 가치와 이념을 떠나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선입니다. 그런 점에서, 2008년 참여연대는 전방위적으로 퇴행적인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저지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더욱 더 보통 국민의 삶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높은 대학 등록금과 사교육비 문제, 종부세 무력화 시도, 부동산-주거비 문제 등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인 이슈로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대안정책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시장과 경제질서를 위한, 정책과 재벌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계속되었습니다.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국민기본권에 대한 침해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적절한 정부 조직개편,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총선후보 정보 공개 활동을 진행했으며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감세정책 반대, 민생 안정,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를 요구하며 99개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정기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2개 MB악법과 악법 최다 발의의원을 선정하고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악법 저지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태안의 삼성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언론, 표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정부 정책에 시민사회단체들과 다각적으로 저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174회 이상의 왕성한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20대를 위한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600여 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시민사회운동 내 소통과 연대를 위한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광우병 대책회의>에 참여해 함께 활동했습니다.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를 결성해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2009 2월 16일 단행본 청소년을 위한 NGO가이드북 <열정세대> 발간 | 3월 23일 복지현장리포트 <권리氏, 현장에 가다> 시리즈 시작, <1호 지역아동센터 편> 발간 | 3월 24일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 개관 |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 3월 단행본 <때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발간 | 4월 16일-18일 아시아태평양 MD 반대와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 6월 10일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 돌입 | 7월 17일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 | 7월 8일 한국 정부의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 5월 19일 SSM 대응 위한 증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발족

시민교육기관 아카데미 느티나무 개관 시민과 함께 가기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은 쉼없이 계속됩니다.

지난 2-3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면서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3월 24일 참여연대가 새로운 시민교육기관을 개관합니다.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민주주의학교, 시민경제교실, 교사 직무연수, 평화학교, 복지학교,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을 만납니다. 참여연대 통인동 건물 <느티나무홀>에는 늘 시민으로 북적입니다. 6월에는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운동> 돌입했습니다. 광장의 폐쇄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광장의 주인인 시민들이 스스로 광장을 찾아오기 위한 운동입니다. 서울시가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부정한 헌



법을 무시하고 만든 광장사용조례에 대한 개정운동으로 조례 개정운동과 경찰의 불법적인 광장 봉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캠페인 사이트 구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7월 7일에는 비정규법과 관련해 정규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영희 노동부장관을 고발하고, 100만 실업대란설이라는 전형적인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 혐의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동안 <헌법이 죽어간다 - 제헌절 맞이 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권리氏 현장에 가다>는 시리즈명으로 복지현장 리포트를 매월 제작하고 있습니다. <1호 지역아동센터 편 : 삼질이 아닌 아이에게 투자하세요>, <2호 2009 대한민국,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 <3호 보육>, <4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나왔습니다. ●

이렇게
움직입니다

목적과 사업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연대 정관 제2조 이를 위해 이러한 활동과 사업을
펼칩니다. 첫째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둘째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셋째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넷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다섯째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여섯째
그 외에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을 펼칩니다.

구성과 운영 참여연대의 활동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합니다. 회원은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와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그리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구 안내 참여연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결구조와 실행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결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되며 보통 연1회(2월) 열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로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처를 두며,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기구와 임원은 모두 참여연대 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



이렇게 참여하세요

회원가입

세상을 바꿀 한 사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든든한 파트너,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전화 02-723-4251 팩스 02-6919-2004 이메일 we@pspd.org

회원전용사이트 활기차 member.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 정기회비로 흔들림 없는 참여연대 활동을 지켜줍니다.
- 강좌와 토론회로 각종 사회이슈 공론에 동참합니다.
- 월간〈참여사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모임에서 멋진 회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총회, 대동제, 송년회 등 회원행사에 참여합니다.
- 강좌와 발행도서에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참여연대 이슈에 동참합니다.
- 다양한 자원활동으로 참여합니다.

후원하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회비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메워갑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참여연대(예금주)

후원금과 회비는 개인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연대가 만든 책들

정기간행물	단행본	
복지동향 월간	시티즌십 : 시민정치론 강의 키이스 포크 (지은이) 이병천 이세형 이종두 (옮긴이) 아르케 18,000원 2009-06-25 ISBN(13) 9788958030881	세계화 시대 한국자본주의 - 진단과 대안 참여사회연구소 한울 27,000원 2007-09-10 ISBN(13) 9788946037977
사법감시 부청기	때법은 없다 - 벼랑 끝에 몰린 법치와 인권 구하기 김창록 (지은이) 해피스토리 10,000원 2009-04-01 ISBN(13) : 9788993225174	한국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나눔의집 18,000원 2007-08-30 ISBN(13) 9788958101031
시민과세계 반년간	열정세대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 김진아 (지은이), 참여연대 양철북 9,800원 2009-02-16 ISBN(13) : 9788990220943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 역사와 좌표 참여사회연구소 한울 29,000원 2007-06-05 ISBN(13) 9788946037502
참여사회 월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 2008 촛불의 기록 글 한홍구 외, 박재동(그림), 한겨레 사진부 (사진),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한겨레출판 13,000 원 2008-12-26 ISBN(13) 9788984313088	불감사회 - 9인의 공익제보자가 겪은 사회적 스트레스 신광식 참여사회 10,000원 2006-10-10 ISBN(13) 9788995579893
	양지를 찾는 사람들- 버마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 뽀 곳사왕 (지은이),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옮긴이) 도서출판 아시아 12,000원 2008-11-25 ISBN(13) 978899579637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 한국의재벌사 1 송원근, 이상호 나남 38,000원 2005-07-18 ISBN(13) 9788930081016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해피스토리 12,000원 2008-06-23 ISBN(13) 9788993225129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 한국의재벌사 2 이윤호 나남 32,000원 2005-07-18 ISBN(13) 9788930081023
	평화백서 2008 - 시민, 안보를 말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아르케 35,000원 2008-05-01 ISBN(13) 9788958030775	재벌의 소유구조 - 한국의재벌사 3 김진방 나남 35,000원 2005-07-18 ISBN(13) 9788930081030
	전환기의 한국복지 패러다임 - 새로운 방향과 대안의 모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간과복지 15,000원 2008-03-13 ISBN(13) 9788980071661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 한국의재벌사 4 김덕민, 김동운, 백영현, 백운광, 유태현, 정재현 나남 35,000원 2005-07-18 ISBN(13) 9788930081047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 한국의재벌사 5 강병구 강신준 김상조 김성희 이재희 허민영 홍덕률 나남 35,000원 2005-07-18 ISBN(13) 9788930081054

짜고 치나 밥시다 -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차병직 | 사금치 | 10,000원
2004-10-17 | ISBN(13) 978895579800

참여연대 사회복지운동 10년의 기록 (전권 7권)(책서+CD)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엮음 | 나눔의집 출판사 | 170,000원(절판)
2004-10-15 | ISBN 89-5810-039-7 94330

참여연대 10년의 기록(책서+CD)

2004-10-01 | 20,000원
참여연대 10년의 기록 모음집
구입문의 : 참여연대 02-723-5300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 실천경영론

박원순 | 나남 | 12,000원
2004-09-08 | ISBN(13) 9788930080545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 참여연대 창설 10주년 기념 논문집

홍성태 엮음 | 아르케 | 15,000원
2004-09-06 | ISBN(13) 9788958030256

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아르케 | 11,000원
2004-09-05 | ISBN(13) 9788958030126

한국의 언론정치와 지식권력 - 시민과세계 총서 002

김만홍 외 | 당대 | 10,000원
2003-08-31 | ISBN(13) 9788981630107

종이비행기 - 차세대전투기(F-X) 시민백서

문규현 외 | 나남 | 14,000원
2003-03-25 | ISBN(13) 9788930039628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경향신문, 참여연대 | 한울 | 13,000원
2003-02-28 | ISBN(13) 9788946030909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7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 사계절출판사 | 7,500원
2002-12-28 | ISBN(13) 9788971969304

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6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 사계절출판사 | 7,000원
2002-12-28 | ISBN(13) 9788971969281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시민과세계 총서 001

박원순 | 당대 | 12,000원
2002-06-22 | ISBN(13) 9788981630843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한울 | 12,000원
2002-06-15 | ISBN(13) 9788946029828

가치를 꿈꾸는 과학 - 교실에서 함께하는 과학윤리수업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STS 교육위원회 | 당대 | 10,000원
2001-12-03 | ISBN(13) 9788981630775

20세기 한국의 야만 1

참여사회연구소 | 일빛 | 13,800원
2001-09-15 | ISBN(13) 9788985893732

20세기 한국의 야만 2

-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위하여, 1960년대~현재

참여사회연구소 | 일빛 | 14,000원
2001-09-15 | ISBN(13) 9788985893787

삭스핀스프와 짬뽕국물 - 참여연대 안내대스크 24시

이해숙 | 아르케 | 8,000원
2001-09-08 | ISBN(13) 9788988791738

한국경제 재생의 길은 있는가?

이병천·조원희 편, 제도경제연구회·참여사회연구소 기획
당대 | 15,000원
2001-08-28 | ISBN(13) 9788981630713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 기행

박원순 | 아르케 | 12,000원
2001-06-05 | ISBN(13) 9788988791684

세계사적 나침반은 어디에 - 참여연대시민강좌 1

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 한울 | 12,000원
2001-02-10 | ISBN(13) 9788946028289

20세기 한국을 돌아보며 - 참여연대시민강좌 2

참여연대 참여사회아카데미 | 한울 | 00원
2001-02-10 | ISBN(13) 9788946028296

유리지갑 흥대리의 세금이야기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 한겨레신문사 | 7,000원
2000-06-20 | ISBN(13) 9788984310285

참여연대와 여성시대의 숨은 권리찾기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5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사계절출판사 | 6,800원
2000-04-10 | ISBN(13) 9788971966600

참여연대 개혁통신

참여연대 | 문예당 | 7,500원
2000-01-27 | ISBN(13) 9788985975674

진보의 패러독스 -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하여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 | 당대 | 12,000원
1999-12-17 | ISBN 6000079176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 박원순 변호사의 미국 시민운동 기행

박원순 | 예담 | 12,000원
1999-10-15 | ISBN(13) 9788988902004

한국 5대 재벌백서 1995-1997

참여사회연구소 | 나남 | 28,000원
1999-08-25 | ISBN(13) 9788930037013

한국재벌개혁론

김대한 편 | 나남 | 15,000원
1999-02-05 | ISBN(13) 9788930036597

공익재단법인백서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 지정 | 10,000원
1998-09-25 | ISBN(13) 9788987315089

주택임차인 스스로 권리찾기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2

하승수 | 사계절출판사 | 5,800원
1998-09-10 | ISBN(13) 9788971965092

혼자 소송하는 법 - 혼자서 해결하는 생활법률 1

이상훈 하승수 | 사계절출판사 | 5,800원
1998-09-10 | ISBN(13) 9788971969748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

참여사회연구소 | 푸른숲 | 18,000원
1997-11-25 | ISBN(13) 9788971841778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참여사회연구소 | 창작과비평사 | 13,000원
1997-12-01 | ISBN(13) : 9788936411572

부정부패의 사회학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이은영외) | 나남 | 12,000원
1997-08-30 | ISBN(13) 9788930035620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 박영률출판사
1996-01-01 | ISBN(13) 9788986099058

●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발행일	2009년 9월 10일
발행인	임종대·청화
발행처	참여연대
기획 편집	최현주
디자인	김다혜
사진	정김신호
주소	110-0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전화	02 723 5508

컨텐츠 활용과 인용은 참여연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